

공익직불제 운영 효율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 농관원, 전담부서인 '직불관리과' 운영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지난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8월 '직

불관리과'를 신설하고, 10일 현판식을 가졌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관원은 전담과 신설과 함께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인 과와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

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에 이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피해 최소화 대책 모색

중기중앙회, 민주 이낙연 대표 등과 간담회 개최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지원 등 7개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경제계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한재웅 정책위원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

영훈 당대표비서실장, 김경만 의원이 함께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앙회 회장단, 김영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운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등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환규제 완화 등 7개의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말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올해 내에 반드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당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UBUNTU) 정신으로 함께 협력하여 대한민국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I·빅데이터 활용

LX, 지적측량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 개발 내년까지 완료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지적측량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를 2021년까지 완료한다.

LX는 국민들이 지적측량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합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측량 이용 고객들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LX사무실이나 시·군·구청 민원실 접수창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과 신청을 통해 측량일정을 통지받아야 한다.

'원스톱 모바일 서비스'가 이뤄지면 스마트폰에서 측량 상담·접수부터 일정배정, 진행상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측량결과와 계산서를 모바일로 실시간 조회·발급·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간편 결제와 모바일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측량 접수과정이 대폭 짧게 된다.

LX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해 국민들이 지적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정렬 사장은 "모바일 서비스가 출시되면 지적 서비스 신청과 제공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측량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벌초할 땐 제초제 '필수'

농촌진흥청(정장 허태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초제를 사용해 산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14일 소개했다.	농진청, 잡초 관리법 소개 '사용설명서에 적힌 정량 지켜야'	용하면 된다. 비선택성 제초제는 분무기로 뿌리면 잔디에 약해를 일으킬 수 있어 잡초에 직접 뿌려야 한다. 비닐장갑 위에 면장갑을 겹쳐 끼고 희석하지 않은 제초제 원액을 면장갑의 손바닥 쪽에 충분히 묻힌 뒤 떠나 역세 등의 밀동치를 손바닥으로 모아 잡고 위쪽으로 훑어주면 보통 2주 내 뿌리까지 죽는다.
우선, 산소에 쑥, 토끼풀, 제비꽃 등 잎이 넓은 잡초나 쇠뜨기가 많이 자란 경우에는 다잡바, 메코프로프, 메코프로프-피, 트리클로피르티에이, 플루록시피르-메틸 성분 제초제 중 하나를 선택해 정해진 용량을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려준다. 이 제초제들은 고추, 콩 등 잎이 넓은 작물이나 사과, 포도 등 과일에 묻으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지 않게 주의해 살포한다.		무기로 뿌리면 잔디에 약해를 일으킬 수 있어 잡초에 직접 뿌려야 한다.
잔디와 잎 모양이 비슷한 띠, 억새 등은 여러해살이풀로, 뿌리가 땅 밑으로 1m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풀베기만으로는 제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포함된 비선택성 제초제를 이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적힌 정량을 지켜야 한다. 사용하고 남은 제초제는 농약 포장지 그대로 꼭 밀봉한 뒤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작물보호과 김현관 과장은 "제초제 사용법을 잘 지켜 사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껴 효율적으로 벌초할 수 있다"라며 "제초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약정보365(pisr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전북농협,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14일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 전주농협농가주부모임(회장 유복자)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농촌의 다양한 가치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전주시 우림로 일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영농철을 전후해 고춧대·깻대 등 각종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로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홍보를 위해 실시됐다.

/김윤상 기자

전진협 전북도회, 민주 한병도 의원과 면담

전문건설업 중요성 강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전북도회는 최근 법안 추진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에 관해 동법안의 과도한 규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한병도 의원과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동 법안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김태경 회장은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한병도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치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적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상기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이는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됨을 초래한다"며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원'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부분 중복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정무하며, 동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법적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평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보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김태경 회장의 의견에 수긍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진다"며 전문건설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